

안전한 사회, 유능한 정부, 성숙한 자치로  
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


안전행정부

# 보고순서

I 국민의 바람과 정책방향

II 국정과제 추진계획

III 부처간 협업과제

# I 국민의 바람과 정책방향



안전행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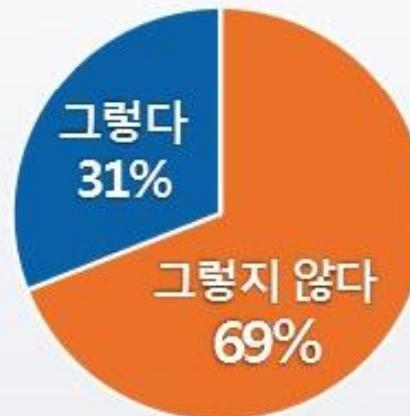
# 우리사회를 보는 국민의 인식과 바람

##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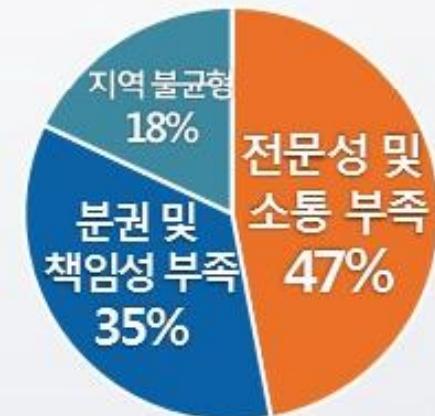
※ 통계청 사회조사 (12.12)

##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



※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(13.3)

## 자치에 대한 인식



※ 안행부 설문조사(13.3)

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『안전한 사회』와  
『믿을 수 있는 정부』, 『제대로 된 지방자치』를 통해  
국민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 
안전행정부가 이 일을 기필코 해내겠습니다.



#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정책 방향

## 국민의 바람

1

###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

- 성폭력·학교폭력·가정폭력·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강력 희망
- 사고·재난 등 생활 속 모든 위험에 대한 선제적·예방적 대응 요망



## 정책방향
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 
『안전한 사회』 실현



## 국민의 바람

2

### 정부운영과 공무원 행태의 개혁

-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,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혁 요구



## 정책방향

국민의 입장, 수요자의 시각에서  
일 잘하는 『**유능한 정부**』 구현



## 국민의 바람

3

###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

- 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되 책임도 수반되는 성숙한 자치 기대



## 정책방향

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주민중심의  
**『성숙한 자치』 정착**



# 2013년 안전행정부 비전과 정책목표

비전

“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”

목표

안전한 사회

유능한 정부

성숙한 자치

주요  
실천  
과제

- 안전관리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
- 국가 안전관리체계 획기적 개혁 ✓
- 4대악 근원적 척결
-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보호

-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✓
- 공공정보 개방·공유로 일자리 창출 ✓
- 국정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✓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-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현 ✓
-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✓
-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✓

※ 『안행부 주관 국정과제』 ✓



안전행정부

8

## II 국정과제 추진계획



안전행정부

# 1.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『안전한 사회』를 실현하겠습니다.

1-1. 안전관리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

1-2. 국가안전관리체계 획기적 개혁

1-3. 4대악 근원적 척결

1-4.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보호



안전행정부

# 1-1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
안전  
개념  
확대

전통적 재난  
(자연적·인적·사회적 재난)

전통적 재난 +  
범죄·사건·사고 등 생활 속 모든 위험

관리  
방식  
전환

- 상황관리 중심의 재난관리
- 부처별 대책·대응
- 사후 대응 위주
- 정부위주의 안전관리

- 신속한 초동대응 및 상시적 안전관리
- 범정부적 협업·관리
- 선제적·예방적·근원적 차단
-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

『국민안전 종합대책』을 4월 중 대통령 보고 후 대국민 보고회 개최

※ 향후 『이렇게 하겠다』는 보고를 넘어 『이렇게 했습니다』라는 성과보고 반드시 실시



# 1-2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.

- 『안전정책조정회의』, 『중앙안전상황실』 설치 및 기능 강화
- 『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』 중심의 강력한 재난대응체계 구축
-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R&D 투자 확대 ('12년 1,780억원 → '17년 5,000억원)
- 범국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『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』 구성·운영

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전면 개정(5월 국회제출)



# 1-3 학교폭력·성폭력 등 4대악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.

## 안전행정부가 『4대악 척결의 콘트롤 타워』 역할 수행

- 4대악별 『감축목표관리제』 도입,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
  - 『안전정책조정회의(안행부장관)』에서 월1회 추진  
점검·독려·평가·환류
- 범죄·사고 등 지역별 생활안전실태를 『생활안전지도』로 작성, 공개
  - 지자체·주민·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한 안전 확보
- 정부·지자체·학교·기업·지역사회·종교·언론 등 협업체계 구축,  
『범사회적 국민참여』 정책으로 추진



## 강력단속과 중·장기적 근원적 해결방안 병행 추진

### 중점 추진대책(예시)

- 인터넷 음란물 유통 차단 등 유해환경 발본
- 신상정보 등록대상 **성범죄자 체계적 관리**로 재범 억제
- 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대책 발굴
- 지자체 특사경 전담조직 설치, 민생범죄 현장 밀착 감시
- 경찰증원인력 2만명, **4대악 척결 및 생활안전에 집중 투입(98%)**



# 1-4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.

## 119 신고 한 번으로 의료 상담·병원이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
- 구급활동·응급의료 정보의 실시간 공동 활용으로  
**응급환자 소생률 제고(12월)**
- 『중증의심환자 맞춤형 전문 구급서비스』 시범 운영(4월)

##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비상 대비 태세 강화

- 전시 대비업무와 평시 재난업무의 연계를 통한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
  - 실제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비상대응태세 훈련 실시
-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**국가통합 콘트롤 타워** 구축 지원



## 2. 정부 3.0으로 『유능한 정부』를 구현하겠습니다.

- 2-1.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2-2. 공공정보 개방·공유로 일자리 창출
- 2-3. 국정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
- 2-4.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

안전행정부

## 2-1 국민이 원하는 복지·행정서비스를 『원스톱 맞춤형』으로 제공하겠습니다.

###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각 부처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
- 통합시스템에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

#### 기초생활수급자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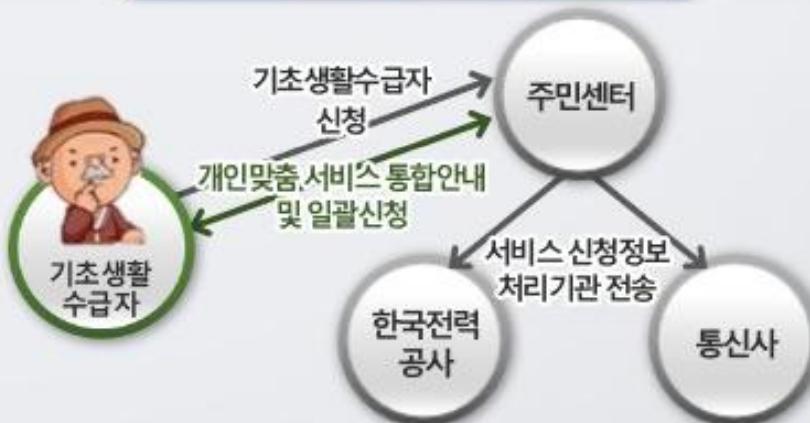
신청 한 번으로 모든 개인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.

#### 현재의 모습



개인이 알지 못하는  
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함

#### 달라질 모습



개인이 알지 못해도  
행정기관에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



# 1천만명이 가입한 『민원24』 대국민 서비스 기능 대폭 확대

- ・『민원24』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생활민원 정보 통합 제공
  - (현행) 인·허가 신청 등 민원서류 발급 위주
  - (개선) 개인별 세금납부 기한, 자동차 검사기한 도래시 사전에 개인에게 자동 통보 등

## 민원24 사례

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를 제공합니다.

### 현재의 모습



[민원 신청·발급]  
주민등록 등·초본  
토지·건축물 대장  
지방세 납세증명서  
출입국 사실증명  
전입신고  
⋮

### 달라질 모습



민원  
신청·발급

+

생활 민원정보 제공

여권만료일  
자동차 검사일  
운전면허 갱신일

온라인 취학통지서  
이동통신 감면신청  
자동차세 완납

세금·공과금의  
체납조회 등

※ 민원24, e-메일, SMS 등으로 자동 통지



안전행정부

18

## 지자체 인·허가 체계 개선, 창업·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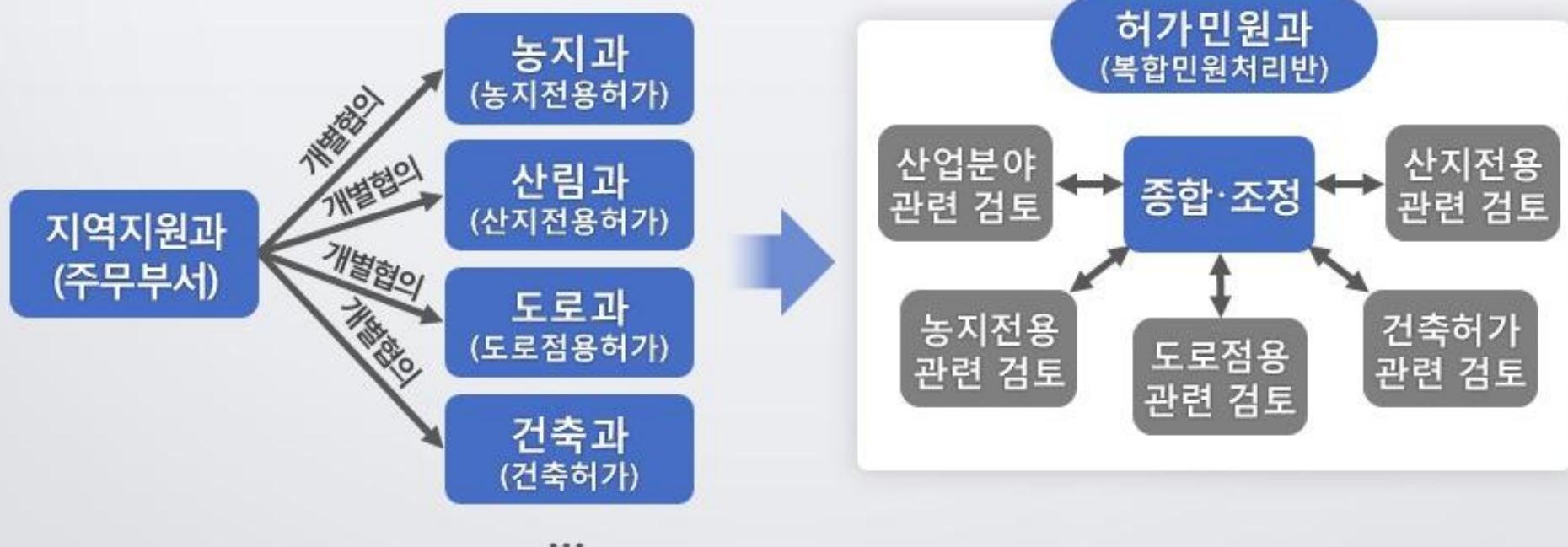
- 부서간 정보공유 및 복합민원 창구 단일화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

인·허가 사례

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편하고 빨라집니다.

현재의 모습 : 20일(법정처리기간)

달라질 모습 : 7.4일(실제소요기간)



## 2-2 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### 공공정보의 과감한 공개

- 모든 공공정보 **공개 원칙**, 비공개 범위 최소화
- 원문정보까지 사전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
- 공공 DB를 민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방형·표준형으로 제공

###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

- 공공데이터를 가공·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**일자리 창출 지원**
- 창의적 앱(App) 개발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

- 『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 제정('13.6월)
-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개정('13.6월)



## 2-3 각 부처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### 부처간 칸막이 제거

- 부처단위 정원관리를 탈피, 『**범정부적 통합정원**』 관리체계 도입
- 국정과제 협업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
  - 협업분야 인력 일정비율(10% 이상) 의무교류, 중앙-지방간 교류 확대
- 소통 활성화를 위해 『**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**』 구축
- 『**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**』 제정('13년 하반기)

### 학력·성별·스펙을 초월한 유능 인재 임용 확대

- 여성·지역인재·장애인·고졸자·저소득층 등 활용 확대
- 민간 현장경험 보유자 공직 채용 내실화



## 2-4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.

### 공직기강 확립

- 자치단체 **회계 부조리 근절**
  - IT를 활용한 자치단체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(청백-e) 구축·보급
- 공직자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**재산등록의무자 확대**(12월)
  - 회계부서, 식품위생 수사 등 특정분야 실무직 공무원(5~7급)

### 전관예우 근절

-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제외 규정 삭제 검토
-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및 행위제한제도 정착 유도
- 취업심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



### 3.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『성숙한 자치』를 만들겠습니다.

3-1.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현

3-2.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

3-3.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



안전행정부

### 3-1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.

#### 실질적 지방분권 및 소통·협력 강화

-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『지방자치발전위원회』 신설(6월)
  - 기초 지자체장·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및 특·광역시 자치구 제도 개선
  - 일반·교육자치 연계 검토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
-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
  - 사무직원 인사권,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
- 『중앙-지방 협력회의』 신설로 협력 강화(6월)



##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운영

- 촘촘한 **복지서비스 전달체계** 마련을 위한 복지역량 강화
  - 인력증원 계획('13년 1,800명, '14년 1,140명) 조기추진 및 추가 증원
  - 시군구 - 읍면동 간의 기능 조정 및 소규모 동(洞) 통·폐합을 통한 복지인력 확충
  - 복지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대책 마련
- 시·군 통합 추진 및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('13~'14)



### 3-2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, 건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.

#### 자주재원 확대로 재정자치 기반 강화

- 지방소비세 확대(5% → 10% 이상)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
- **증세 없는 재원 확보** 방안 추진
  -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, 연간 약 7천억원 세입 증가
  -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한 **『지방세외수입징수법』** 제정(4월)
  - 비과세·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으로 축소(22.5% → 15%)



## 지방재정의 지출건전성 제고 및 재정격차 완화

- 대규모사업의 투융자 심사 및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
- 지방·국가 재정시스템 연계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
- 행사·축제·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 제공(8월)
- 교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, 재정 형평성 강화



### 3-3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.

####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국민통합 지원

- 결혼이민자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『읍면동 생활멘토단』 시범 실시
- 기부금품 모집·자원봉사·재능나눔 활성화 방안 마련(5월)
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추진(법 제정, 6월)



##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서민생활 안정

- 서해5도 등 도서·접경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여건 조성
- 자전거길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
- 지방물가 안정관리, 생산적 일자리 조성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
  - 마을기업 육성(1,000개), 취약계층 일자리 조성(2만개)
-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마을 금고 육성 및 경영 건전성 강화



### III 부처간 협업과제



안전행정부

## 1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

인력, 장비, 자재 등 기관별  
방재자원 분산관리

※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시  
중화제인 석회가 22시간 이후  
확보되어 피해 확산

방재자원 공동 활용을  
통한 신속한 현장대응

- DB구축 및 법·제도 정비

## 2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

전기료, 지방세 감면,  
융자 등 기관별로  
주민이 개별 신청

『생활안정지원센터』에  
1회 통합신청, 일괄 지원



### 3

##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

### 부처별 분산·중복 투자

※ 5개 부처, 15개 사업, 총 5천억원/년

관련 부처간 협업으로  
통합적 연계·융합

- 마을, 지역 단위로 관련부처 예산  
통합 추진 등

### 4

## 다문화 정책 실효성 제고

### 부처·기관별 칸막이 추진

- 정보공유 부족으로 중복 수혜 및  
업무 사각지대 발생

다문화 정책 협업 체계 구축

- 정부 + 지자체 + 유관기관 협력
- 수혜자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 
부처 정책 통합 추진



안전행정부 전 가족은

안전한 사회,  
유능한 정부,  
성숙한 자치로

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.